시민군 광주교도소 습격 없었다…'신군부가 조작' 사실로

31사단 전투상보 작전요도 첫 공개

신군부가 조작한 '시민군 교도소 습격설'을 정면 으로 반박하는 31사단의 기록이 처음 공개됐다.

이 기록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를 지키던 31사단은 실탄을 지급 받고 시위대와 20여차례 조우했으나, 이들을 설득해 자진 철수시켰다. 하지만 1980년 5 월21일 오후 투입된 3공수여단은 시위대를 사살했 으며 이를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는 현재 까지 '교도소 습격설'을 주장하고 있다.

15일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가 공개한 31사단 전투상보 작전요도에는 시민군의 습 격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1사단은 5월20일 자정께 96연대 2대대 471명(장 교 2명)을 광주교도소 경비에 투입했다. 21일 오전 에는 헬기를 이용해 개인당 90발 분량인 실탄 총 4 만발을 보급했으며 경비대대 250여명을 추가 배치 했다. 31사단장은 '교도소 접근시 발포하라'는 지시 까지 내렸다. 지난 1995년 검찰조사에서는 광주교 도소에는 2700여명이 수감돼 있었다.

96연대는 실탄을 지급받고 3공수여단과 교대하 기 전인 21일 오후 7시20분까지 교도소를 방비했지 만 시위대와 충돌 사실은 없었다.

31사단 전투상보(작전요도)에는 당시 광주교도 소 일대 지형지물과 부대배치 위치가 손으로 그려 져 있고, 시위대와 조우한 상황이 적혀있다. 작전요 도 왼쪽 하단에는 5월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 지 15~16회 난동자와 조우했지만 수색중대장의 설득·권유로 자진 철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오른 쪽 상단에는 '5월21일 오후 1시~5시 5~6회 난동 자와 조우, 11경비대대장의 권고·설득으로 자진철 수'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31사단이 3공수여단으로 교체된 시점부 터는 사살이 시작되는 등 상황이 급변한다. 군사전 문가들은 이를 교도소 방비와 시위가 광주 외곽으 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무차별 봉쇄작전 을 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5월21일자 기무첩보보고 '광주 소요사태'(21-51

실탄 4만발 보급 96연대 투입 시위대와 20여차례 조우 했지만 지휘관 설득 · 권유로 자진 철수 경비병 3공수여단으로 교체후 항쟁 확산 차단 위해 무차별 사살

호)를 살펴보면 이날 오후 8시 광주~담양간 고속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는 3공수 부대원들을 시위대가 산 위에서 경기관총으 로 집중사격했다. 3공수 부대원들은 응사해 시위대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다고 나와있다.

또한 같은 문서 오후 8시40분 상황을 살펴보면 '2 군 사령관 경계 강화 지시 하달' 사항으로 순천 전 주 교도소 침탈이 예상되니 경계를 강화하고 무기 가 피탈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지난 1995년 검찰조사에서는 계엄군들은 5월21일 낮 12시20분부터 5월23일 오전 10시20분까지 6회 에 걸쳐 폭도들이 교도소를 기습공격해 8명이 사망 하고 7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진술했다.

김희송 교수는 "이런 사실은 모두 조작됐을 가능 성이 높다. 31사단과 달리 기계적으로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3공수여단은 민간인 피해를 고려 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하면 무조건 쐈을 것"이라며 "5·18 당시 광주에는 주유소가 몇군데 없어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교도소 인근 주유소로 간 시민들 도 희생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31사단 입장에서는 시위대가 교도소로 접 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토사단인 만큼 대화를 먼저 시도했고 시위대가 자진철수하며 큰 마찰은 일 어나지 않았다"면서 "신군부 입장에서는 광주 항쟁 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을 것"이 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15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518인분 주먹밥 만들기 행사에 참가한 북구청 518인분 주먹밥 만들기 직원과 주민이 주먹밥을 만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오세요

6개동 내달 17일까지 개방…역사현장 탐방 프로그램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였 던 옛 전남도청이 다음 달 17일까지 개방된다.

15일 옛 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5·18 38주년을 맞아 옛 전남도청 부속 건물 6개 동을 개방하기로 했다.

1980년 5월 27일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산화한 옛 도청 민원실동 2층 등 역사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다. 시민군 활동 중심으로 5·18 역사현 장을 안내하며 원형훼손 논란에 휩싸인 지금 모습 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1980년 5월 항쟁 이후 고통 속에서 살아온 5·18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해설사와 함께 역사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청사 건립부터 5. 18과 촛불혁명 등 도청의 100년 역사가 담긴 자료 도 선보인다.

이밖에 항쟁 당시 광주 시내 지도를 퍼즐로 완성 하고, 사적지 낱말풀이와 오월카드를 활용해 5·18 역사를 이해하는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옛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 6개 보존건물은 문화 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 철거 등 원형훼손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전당 개관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열흘 간의 나비떼'라는 주제로 광주 정신을 구현한 전시 물을 채워 한 달 동안만 시민을 맞았다.

옛 전남도청복원협의회 관계자는 "5·18 최후 항 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훼손돼 안타깝다"며 "전시물을 통해서라 도 처참했던 당시 광주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대통령 5·18 기념식 올까

모든 일정 비우고 한미정상회담 몰두…깜짝 참석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비두고 일주일 앞 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방식과 관련한 구 체적 아이디어들이 속속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좁 히고 불확실성 제거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것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지난 14일 열린 수석ㆍ 보좌관회의 외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로부터 한미정상회담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다.

오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각 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깜짝 참석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은 물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기념식 과정에서 5·18 당시 희생당한 아버지를 둔 유가족 김소형씨(37)를 포옹하며 위로해 광주를 넘 어 전국의 민심을 울리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야 하 는지 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한미정상회담 준비



에 진력하는 이유는 이번 회 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중대 변수이 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으로 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지금까지 확인한 북한 의 비핵화 관련 입장을 상세 히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

에게 북미 회담에서 필요한 '노하우'를 전달, 북미 간의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비핵화 합의 의 핵심인 구체적 이행 방안을 두고 확인되지 않은 관측들이 쏟아져 나와 북미 정상 간 담판에 악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에 대한 대처도 필 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 대통령 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북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없애고 서로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중재역할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 간의 핫라 인 통화 가능성도 열려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 자는 "핫라인 통화는 16일 고위급 회담 이후,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경우 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과물을 두고 하는 방 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